

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

◆ 근거규정 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2조

□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란?

- 공무원이 인·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,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

□ 의견제시 절차



- (신청) 공무원이 인·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충분한 정보 제출
- (검토) 적극행정책임관이 안전의 중요성 · 시급성 검토

적극행정위원회 안전 제한 사유

- ☑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·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- ☑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
- ☑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
- ☑ 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
- ☑ 상정안전과 관련된 감사조사 또는 수사, 소송,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

- (심의) 신청 후 30일 내 적극행정위원회 상정 의결

□ 의견제시 효과

- (징계 등 면제) 의견제시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결 등 면제
- (징계요구 등 면책)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
- (면책건의) 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건의

참고

2021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활용사례

❖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: 3건

애로사항 불명확한 법령, 인허가 규제 등 으로 인해 개별 부서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

해결노력 적극추진 안전 상정 의견제시를 통한 공무원 신속한 의사결정 적극 지원

⇒ 신청부서 : 도시관리과, 늘푸른과, 환경위생과

❖ 주요 심의 안전

주요안전	쟁점사항	적극추진 심의사항	조치결과
상가건물과 도로와의 연결부지 안전펜스 철거 건	중동 힐상가 건물 뒤편 지상 4층과 도로 연결을 위한 펜스 철거 관련 주민갈등첨예	조건부가결	상가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과 건물 엘리베이터 상시개방 등 공공성을 보완하여 추진
영업주 본인이 신청한 폐업신고 철회 건	단란주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실수로 폐업신고를 한 것에 대해 폐업신고 직권 철회 가능여부	원안가결	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고려 폐업신고 직권 철회 가능
하수관로 긴급복구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 건	재해위험이 있어 사유지에 하수관로 긴급공사를 시행, 토지 소유주의 사용료 지급 요청에 따른 지급근거 부재	원안가결	토지 소유주에게 도로점용료에 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되, 하수도법 개정('22.2.6.)이후 지하 부분 사용 보상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재산정 후 지급